

도, 자살예방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도·14개 시군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 민관 합동 대응체계 운영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7월 전면 시행... 촘촘한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개입'과 '촘촘한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자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2024년 도내 자살 사망자 수는 562명(자살률 32.3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2025년 자살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4대 과제 22개 전략) 집중 추진한 결과, 자살 사망자 수를 446명(잠정치)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20.6%(116명)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구축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강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군 조기 발견 △24시간 위기대응 △응급실 사후관리 △자살유족 지원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위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도와 14개 시군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기존 47명에서 60명으로 확

대해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24시간 위기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평일 주간에는 기초센터가,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광역센터가 대응을 맡아 시간대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살 시도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도 확대된다. 전북대병원 등 현재 5개소인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6개소로 확대해 응급실 단계부터 전문 인력이 조기 개입하고,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연

계한 지속 관리로 자살 재시도 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 7월부터 자살유족의 심리·법률·행정 처리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24시간 초기 발굴 및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명지킴이 교육 확대, 9:10 캠페인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촘촘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1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고용노동부 추가 공모 선정

'버티이음프로젝트' 최종 선정... 국비 10억원 추가 확보

화학물질·고무 제조업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직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서 '버티이음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버티이음프로젝트'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화학물질 및 고무제품 제조업 근로자가 대상이며, 전북자치도는 급격한 고용 충격이 근로자의 일시적 생계 불안이나 이탈로 직결되지 않도록 맞춤형 안심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업이 신청하며,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계좌이체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정책의 신속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정책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지역회계 활용을 통해 근로자의 가계 안정은 물론 골목상권 매출 증

대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임금 형태의 '근로자 안심 패키지(최대 50만 원)'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새출발희망지원금(최대 50만 원)'이 핵심이다.

한편 도는 이번 추가 공모에 앞서 올해 초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기초이음프로젝트' 국비 42억 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지자체 자율 설계 사업인 '지역자율계정' 예산 43억 원과 이번이 추가 확보한 '버티이음프로젝트' 10억 원이 더해지면서, 전북자치도의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국비 확보액은 총 95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전년도 국비 확보액인 65억 원과 비교해 30억 원(46.2%)이 증액된 규모다.

/1만호 기자

도,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장점검... "도민편의 최우선"

김중훈도 경제부지사, 고창 고창읍·정읍 수성동 현장 방문... 도민 불편사항·운영현황 점검·신청 절차 및 지급 애로사항 청취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창과 정읍을 각각 찾았다.

김 부지사는 이날 고창군 고창읍과 정읍시 수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폈다. 신청·지급 절차상의 불편 사항과 현장 혼잡 여부도 확인했다.

오프라인 지급수단인 선불카드 등의 재고가 충분한지 점검하고, 접수 창구와 대기 공간을 살펴며 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충분한 실내 공간 확보를 당부했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 주민은 2차 기간에도 신청한 점을 적극 안내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해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추진, 신청 과정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고창군은 모바일·카드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 기한을 명시해 기한 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은 7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총 120만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2908명이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 첫날인 18일 기준 지급률은 25.7%를 기록해 전국에서 2번째로 빠른 집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고, 대상자 선별부터 신청 안내, 지급 수단,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 왔다.

현장점검에서 발굴된 불편 사항은 즉각 보완하고, 지급 상황을 지속 모

니터링하며 도민이 신청·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도민들에게 지원금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효과 톡톡'

전북 청년 9900명 자동 가입... 군 복무 안전망 강화

최근 3년간 934건·5억5000만원 지급... 실질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청년 장병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다.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약 9,900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도와 시군이 전액 지원한다.

국방부 병 상해보험이나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군 장병들은 입원과 수술, 골절, 화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질환 위로금과 중증질환 진단비까지 포함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덜 수 있다.

지난 2023년 처음 도입한 이후로 올해까지 4만 2,900명의 전북 청년이 수혜 대상이 되었으며, 총 934건, 5억

5,371만 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상해인원 41.5%, 수술비 20.9%, 질병인원 16.8% 순으로 집계됐다. 지급액 역시 상해인원 비중이 가장 높아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부상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1~3월)에도 총 47명에게 120건, 4,934만 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익산시가 1,39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 1,122만 원, 군산시 572만 원 순이었다. 지급 시에는 상해인원과 질병인원, 수술비, 골절 위로금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발생했다. 군 장병들이 복무 중 겪는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에 대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

도는 전북지방병무청과 협력해 병역관점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추진하고,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항목,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해 군 입영 전부터 제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만호 기자

도, 'K-푸드 엑셀러레이터' 공동구축

식품연구원 등 6개 기관 협력

농식품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전북 K-푸드 엑셀러레이터 공동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컬처 확산에 따른 글로벌 K-푸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북을 K-푸드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도내 농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과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비롯해 정책자금 지원, 수출 바우처 연계, 기술 이전, 마케팅 지원 등 기업 성장 전반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별 지원 기능을 연계해 연구개발(R&D)부터 생산, 금융, 해외 판로 개척까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도내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지원사업도 지속 펼치고 있다. 기업 애로기술 발굴·해결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 매칭과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창업 지원, 농업-기업 연계 사업 등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구축과 유망기업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1만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현대차

사업추진 지원단 조직 구성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균)는 19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추진하는 대규모 미래 혁신 투자의 성공적인 이행과 안착을 위해 '현대차 사업추진 지원단' 조직을 구성하고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공사와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행정으로 투자를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새만금 육상태양광 1~3구역 발전사업 등 공사의 그간 사업 경험을 살려 도시개발, 에너지사업 등 각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분산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민주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노동위원회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송·배전설비 이용 과정에서 '선착순 접속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

지 사업도 일반 민간사업과 동일하게 장기간접 접속 대기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특히 호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포화 현상으로 접속 지연이 수년째 이어지는 등 구조적 병목 현상이 심화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선착순 원칙을

중심의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주민이 참여한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부터 먼저 연결해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는 최소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인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만호 기자

→ 1면에 이어... '전북 발전의 자산'

의료·농생명 분야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캠퍼스 설립과 농업 AX 플랫폼 지원센터 구축, 스마트광 확대 등을 추진해 전북을 생명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공제기관 등 자산운용 금융기관 유치를 통해 전주를 제3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와 함께 시·군별 미래 전략 공약도 공개했다. 전주에는 인공지능 신도시 혁신 허브센터 구축과 탄소복합소재 기반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군산에는 새만금 국

제공항 적기 개항 및 활주로 확장, 익산에는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등이 담겼다.

남원은 바이오소재 첨단산업과 지리산권 치유 정주 도시 조성, 김제에는 AI 농업로봇 국가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또 무주에는 항공우주산업 투자 선도지구 지정 추진, 진안에는 예코토퍼스 관광모텔 구축, 장수에는 호남권 소방 안전 허브 조성, 임실에는 KTX 역사 추진과 반려동물 치유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고창과 부안에는 RE100 국가신원 기반 조성, 해상풍력 연계 사업 등이

반영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AI와 RE100 산업 공약이 서부권 중심으로 집중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발표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사업은 동부권과 서해안권까지 연계되며 전북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택 후보도 "당 공약과 별도로 도지사 후보 공약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며 "농업과 기본소득, 영농형 태양광, 산지유통센터 등 농부권 관련 공약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